

삼성경제연구 '지방경제' 보고서

# '금융위기' 최대 피해자는 광주·전남

## "심각한 지역편차... 지방경제 응급처방 시급"

### 광주, 산업생산 쪼그라들·어음부도 전국 13배

광주·전남이 금융위기의 직격탄에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산업구조, 혁신역량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조선 등 구조조정 대상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광주·전남 등 지방 경기는 더욱 급속히 냉각돼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응급처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지역편차=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특히 경기 불황의 여파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산업 격차가 큰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과 대응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 1월 산업생산의 경우 광주가 -35.8%, 대구 -32.6%, 전남 -34.8% 등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감했다. 이런 기조는 1분기 내내 이어져 수도권권을 제외하면 경남이 -25.6%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25.1%) 광주(-21.0%), 대구(-20.8%), 대전(-18.5%)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들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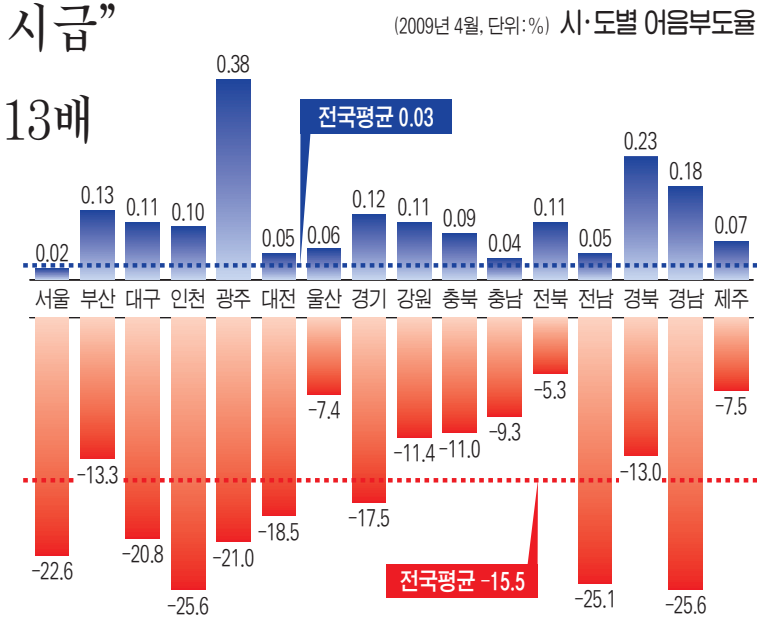
은 건설·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았다.

반면 자동차, 반도체 및 IT기기, 화학 분야의 수출 주력이 집적된 울산, 충남북, 경북 등은 산업생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주는 해외 관광객 유입과 고환율 덕분에 산업생산 증가세가 지속됐고, 실업률도 1%대를 유지했다.

지방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도 매우 높았다. 4월 중 광주 지역의 경우 0.38%를 기록, 전국 평균(0.03%)의 약 13배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을 뺀 지방 평균(0.13%)보다도 3배나 높은 수치다.

◇침체원인=지방 경제의 침체 원인은 인구의 산업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꼽혔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난 1992년 44.1%에서 44.8%로 4.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에 호남권과 동남권의 인구 비중은 1.9%포인트와 1.4%포인트씩 감소했다.

2007년 기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1%로 서울(90.5%)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지방세수의 비중도 전남이 8.6%로 최저인데, 서울은 43.7%로 5.1배나 됐다. 지방은 자체 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 낮은 성장률 탓에 재정 수입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지역 간 격차가 벌어



지는 현상을 가속화해 우리나라의 지역내총생산(GRDP) 공간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대응방안=연구소는 이에 따라 지방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응급처방을 확대하는 등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산업역량의 차이가 커서 이에 따른 대책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바이 로컬(Buy Local)' 운동의 확산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소재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에 강소기업을

키우라는 조언이다.

둘째는 '지역화폐운동'의 전개다. 지역 내 비즈니스 지불 수단으로 지역 화폐를 이용토록 하여 지역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나서자는 취지다.

셋째는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세로 통합해 지출 범주를 정하는 '포괄 지원금' 제도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제안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방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졌다"며 "맞춤형 긴급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교협 200개대학 총장 '입시 선진화' 공동 선언문 내용

## 성적위주 선발 줄여 공교육 살리기

### 고교-대학 협력체제 강화 입학사정관제 정착 노력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한 대입선진화 공동선언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성적위주의 선발 지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대교협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6·10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는 등 시기가 좋지 않다며 행사를 전격 취소하는 소동을 겪었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선언문 요지.

우리나라는 대입문제로 해마다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높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오랫동안 성적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온 현행 대입 제도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한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창의성과 인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개발시켜 주는 초·중등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인재관 사교육의 도움이 없이 초·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으로 육성·계발시켜줄 수 있는 공교육 체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첫 출발점은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대학 총장들은 성적 중심의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성적위주의 입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교협과 개별대학의 차원에서 고교-대학 간 협력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한다.

또 고교의 교육과정이 보다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되며, 대학에 제출한 자료가 학생을 선발하는 전향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고교와 협력한다.

이와 함께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선발방식을 다양화·특성화하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한다.

대입 선진화의 핵심수단인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감독하는 내부 관리체제를 마련하며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전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더불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연수와 사례발표회, 지역순회 설명회, 해외벤치마킹 등을 강화시켜 나간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교협 내의 '대입상담교사단' 활동을 강화하고 상담 자료를 확대하며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 전국 군단위 최소 1명 서울대생 배출

### 서울대 2011년 지역할당제 도입

서울대가 9일 발표한 2011학년도 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지역할당제'의 도입이다. 지역할당제는 수시 정원의 모집 기회균형선발 전형에서 지난 수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하지 못한 소외 지역을 배려해 학교의 지역적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 "개인적으로 3년간 한 명도 입학하지 못한 군에서는 최소 1명씩은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전국 86개 군단위 가운데 2006년 이래 서울대 입학생이 나오지 않은 곳은 모두 17곳. 김 본부장의 의견대로라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의 모든 군에서 서울대 신입생을 배출하게 되면서 서울대생의 지역적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높은 학생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1학년도 입시의 지역할당제는 '정원의 모집'과 '입학사정관제도'라는 두 가지 선발 방식을 통해 역차별 논란을 피해 갈 전망이다.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의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과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입학사정관제로 수험생의 환경과 잠재력 등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만으로 수험생들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 입학 정원의 38.6%에 달하는 1천200여명을 입학사정관 제도로 선발하고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 '남약 시대'

전남도교육청의 '남약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오후 2시 무안군 남약신도시내 신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갖는다. 사진은 전남도교육청 전경. /최현배기자 choi@

대한민국 보청기의 자존심  
세기보청기

www.seegiboshinggi.com  
1588-8419 / 060-222-0100